

김태흠 “與에 얻어터지고 분풀이”…홍남기 “그렇게 말하지 말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서 설전 金 “훈계하는 거냐…부총리 그만뒀라” 洪 “정책 내용 문질…국민 보고 있어”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 태도를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홍 부총리 역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며 굽히지 않고 맞섰다.

김 의원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총리님 답변 태도가 그게 뭐냐? 동료 의원이 다음에 추경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더니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어 그는 “지금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하겠다고 해서 추후 코로나19 피해 규모를 보고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위

한 추가 추경을 하겠느냐고 묻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느냐”며 “여당에서 여기에 얻어터지고 저기서 터진 것을 분풀이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비난했다.

이어 홍 부총리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 맞서자 김 의원은 “훈계하는 거냐”고 목청을 높였다.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확정을 두고도 설전이 오갔다. 김 의원이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최종 결정인가”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했고 당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했다”

고 답했다. 김 의원은 “수용이나, 결정된 거냐”고 재차 질문하자 홍 부총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에서도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금 싸우러 왔느냐”고 공격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에서 피해계층에 대해 두텁게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일요일 비공식 당정회의를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하기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씀드렸다”며 “최종적인 것은 국회에 제출할 때 확정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수습에 나섰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여당과 정부가 혼란스럽게 논의가 되고 그랬는데 어제 (선별적) 발표를 하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질문했는데 (홍 부총리가) 불만스럽게 답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 “선별적 지급 추후 보편적 지급은

재정 상황, 피해 규모를 보고할 문제라고 말씀하면서 정부가 (추가 추경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도 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추경을 예고하고 하느냐, 해당 수요가 발생했는데 예산 수요가 없으면 (추경을) 하는 것”이라며 “지금 저보고 2차 추경, 3차 추경을 물어보면 (답변할 수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김 의원은 “(답변을 못 하면) 부총리 그만두셔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갈 것 같고 세계적 흐름이 어떻게 될지 파악하고 있어야, 선별적 지원을 하더라도 어디가 대상인지 정리가 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총리 답변은 나도 할 수 있다. 검토가 안 돼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피해 규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를) 파악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며 “3월에 추경안을 제출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맞섰다. 이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정확히 말씀드렸다”

면서 “정책 내용을 여쭙보시라. 그런 식으로 질문하지 말라. 국민이 다 보고 있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기자

주호영 “부적격 장관들 보고서 별도로 만들어 기록 남길 것”

“신의 없는 여당…정치를 조폭 수준 윤리로 낮춰”



국회의원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부적격으로 의견을 냈던 국무위원에 임명된 신 분들에게 부적격 보고서를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여러 부적격 국무위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정부·여당이)

보고서를 채택하고 임명한 예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유를 별도로 정리해서 왜 안되는지 기록으로 남겨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을 뿐 아니라 공문서 관련이나 논문 관련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끝까지 절차를 밟고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의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 추천 요구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먼저 우리가 요구를 꾸준히 한 게 있다. 대통령 특별감찰관에 대해 여당은 4년째 임명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왜 (추진을) 안 하냐고 하는데 그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교섭단체에서 절반을 지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당) 협조가 없으면 저희들이 명단 발표하고 우리라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치는 힘이나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니다. 믿음과 신의가 어긋나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며 “법도 지키지 않고 철석같이 한 약속을 자기들 목적 달성 이후 나 몰라라 뭉개는 것은 정치를 그저 조폭 수준의 윤리로 낮추는 저급한 행위”라며 “다시 한번 청와대와 민주당에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지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뉴스스

또 국회에 발목잡힌 공수처…‘야당 패싱’ 검사 선발할까

“특별감찰관도 지명” 정치적 갈등 4월 1호사건 수사착수 계획도 차질 공수처법상 야당 없이 ‘선발’ 가능 김진욱 “야당 추천, 다시 한번 요청”

수사 역량을 갖추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직 구성 작업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발목을 잡혔다. 검사 선발을 위한 협의체에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참여해야 하는데, 야당이 다른 사안과 얽여 명단 제출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조만간 국민의힘에 공수처 인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다시 요청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지난 2일 여야가 각각 공수처 인사위원 2명을 이날까지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국회로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나기주·오영중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국민의힘은 아직도 답을 내놓지 않는 중이다.

공수처 검사 선발은 서류·면접 심사, 인사위원회 심의·추천,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현재 공수처는 서류·면접 심사를 위한 외부위원을 대부분 선임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다음달 중 서류·면접

심사를 마치고, 인사위 추천을 거쳐 최종 후보군을 임명 제정해 4월말 수사 업무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야당이 아직 인사위원 명단을 내놓지 않고 있어 검사 선발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명하지 않으면 공수처 인사위원도 추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 차원에서는 인사위원 추천을 위한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다른 요구 사항의 수용 없이는 명단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야당의 인사위원 추천을 더 기다리겠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계속해서 인사위 구성이 지연될 경우, 시간에 쫓긴 공수처가 야당을 제외하고 검사 선발에 나설 수도 있다.

현행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검사 선발 등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만 있다.

인사위는 ▲처장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여당 측 추천인사 2명 ▲야당 측 추천인사 2명 등 모두 7명으로 이뤄진다. 이 중 야당 측 인사위원 2명을 제외해도 과반수인 5명을 채울 수 있는 것이다. 공수처 출

범 이후에 제정된 검사 인사규칙에도 야당 측 인사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도 이른바 ‘야당 패싱’ 우려를 꾸준히 제기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김 처장의 인사청문회에서 “7명 중에 5명이 처장과 차장, 차장이 지명하는 1인이고 여당이 추천하는 2인이다. 다 수결로 가면 인사 전형이 되는 것”이라며 “(검사 임용 등의 의결을) 만장일치로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처장은 만장일치제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만 김 처장은 ‘야당 추천한 4명의 위원에 포함된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검사를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전제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일단 검사 지원자들의 서류·면접 심사를 진행하면서 야당의 인사위원 추천을 기다린 후 추후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 처장은 이날 “아무래도 기한을 다시 정해서 길지 않은 기한으로 다시 한번 (국회에) 요청해야 될 것 같다. 열흘 정도”라고 언급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